

알립니다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강원경제인페스티벌

강원경제 주인공을 초대합니다

19~20일 하이원호텔서 개최 ... 강원경제인상 시상

창간 72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정선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7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수여하는 제11회 강원경제인상의 시상식이 열립니다. 강원경제인상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수기업들을 선발, 총 7,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급변하는 경제 정세 속에서 지역경제인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7 강원경제인포럼도 열립니다. 산업정책 분야 최고 권위자인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맡으며, 도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강원경제의 미래를 향한 축제의 자리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2면에 계속

■주최·주관 : 강원일보사·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후원 : 강원도·정선군·강원랜드·신한은행 강원본부

공사수주 줄어 건설업 '흐림' 광공업·식료품업 생산 '맑음'

올해 7월 도내 건설수주는 감소한 반면 광공업은 호조세를 보였다.

동북지방통계청의 '7월 강원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도내 건설수주액은 4,3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5% 감소했다. 전국 건설수주액 8조2,954억원의 5.3% 수준이다.

특히 공종분류별 토목 부문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2.8%나 떨어졌다. 철도·궤도, 토지조성, 치산·치수, 상·하수도 등의 수주 감소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도내 재건축주택, 사무실, 숙박시설 등의 수주 둔화로 건축 부문도 0.7% 하락 폭을 그렸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각각 7.4%, 3.8% 감소하는 등 7월 도내 건설수주동향은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나타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4.2% 오르는 등 호조를 보였다. 올해 1월(-4.7%)을 제외하고 7월까지 꾸준한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100%), 의료정밀광학(20.6%), 전기·가스·증기업(13.9%)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음료와 식료품도 각각 12.2%, 6.4% 오르며 호조에 발 맞췄다. 윤종현기자

알립니다 2017 강원경제인페스티벌 - 1면에서 계속

■19일(오후 3시)

◇강원경제인상 시상식

△시상부문 ▽창조기업상 = 트로피 및 상금 3,000만원

▽연구개발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건설혁신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창업성공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특별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2017 강원경제인포럼

-기조강연: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중요성과 과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좌장: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

■20일(오전 6시30분~오후 2시)

◇조찬강연 : 정영훈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원경제인 친선골프대회 △티오프 : 오전 6시30분

△장소 : 하이원CC

■참가신청 : 강원일보사 홈페이지(www.kwnews.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peace@kwnews.co.kr),

팩스 ((033)-252-5884)로 제출

■문의 : 강원일보 경제부((033)-258-1340-2)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5일 오전 10시 춘천 라데나컨트리클럽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

하고 현안을 논의.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5일

오전 10시 춘천 라
데나컨트리클럽
회의실에서 열리
는 임원회의에 참
석, 당면 현안을 협
의한다.

인 급 진 단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필요하다**

건설 진입문턱 현실 맞게 낮추고 '페이퍼컴퍼니' 검증은 깐깐하게

보유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 축소와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건설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입 문턱은 낮추되, 까다로운 입찰 검증으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걸러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6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5개 업종으로 나뉜다. 토목공사를 하려면 기술자 6인 이상, 자본금 7억원 이상을, 토목건축공사는 11인 이상, 12억원 이상의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건설시장 '몰랑남' 침체 속
중소사뿐 아니라 대형업체도
등록요건 유지하기 힘겨워**

**전문가 "기술자 보유기준 완화
부실업체 필터링은 강화해야"**

하지만 대다수 중소 건설사들은 이 같은 등록기준을 유지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해마다 단 1건의 공사도 따내지 못하는 건설사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자 보유인원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 자료를 보면 건축·토목 등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70% 이상이 등록요건을 간신히 채우고 있다. 토목공사는 기술자 6인을 보유한 곳이 전체의 72.2%였

고, 7인 이상은 24.0%에 그쳤다.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기술자 대역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가 몇 년 전 건설업 전문경영인(CEO) 3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3%가 기술자 법적 기준의 80% 이상을 대역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술자 등록기준을 낮출 수도 없다. 소규모 공공공사에선 입찰의 변별력이 낮아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나 부실업체가 손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 기존의 정상적인 업체들도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입찰용 회사를 늘리려는 이른바 '썩개기'가 만연할 우려도 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기술자 보유기준만 낮추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입찰과 보증, 사후관리 등 건설업자 선별기능을 강화한 후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日 건설업 허가제 '정부-지자체'로 이원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안은 대부분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 건설업은 이원화된 허가제다.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국토교통성과 도도부현에서 각각 건설업 허가를 내준다. 1개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설치할 때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2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설치해 영업을 하려면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업종 구분은 토목역시, 건축역시, 목공사, 전기공사 등 28개 업종이다. 1개 업종만 취득한 자가 전체의 60%로 비교적 전문화돼 있다.

건설업 면허는 일반과 특정, 지정 등 3가지다. 일반건설업은 하도급 없이 직접 시공한다. 특정건설업은 하도급 금액이 3000만

10년이상 경력 갖춘 기술자
영업소마다 최소 1명 배치

**美·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종합-전문 업종 구분없이
발주기관 등 자체 판단따라
최적의 시공사 선정기준 운영**

엔 이상(건축 4500만엔 이상)으로 전일 기술자 및 재산적 기초요건이 있어야 한다. 지정건설업은 토목, 건축, 관, 전기, 조경, 강구조물, 포장 공사 등 7개로 나뉜다. 전일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1급 기술자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허가 건설업체 수는 총 49만8806개다. 일반건설업이 47만7102개로 가장 많고 이어 건축공사(17만7407개), 토목공사(14만4039개), 특정건설업(4만5305개) 순이다.

인력 기준은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일기술자 1인을 영업소마다 최소 1명씩 뒤야 한다. 고졸(5년), 대졸(3년) 등 최종학력에 따라 경력조건이 다르다. 경력입원 1인은 5년 이상 건설업 경영업무 관리책임자 경력을 요구한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에선 한국과 같은 업역(종합-전문) 구분이 없다. 주로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자체 판단에 따라 과거 공사실적이나 해당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통해 최적의 시공자를 찾는다. 김태형기자

인터뷰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일감 없는데 기술자 상시보유 부담 커 공사 규모별로 등록기준 차등화 필요"

"지역 중소기업들은 일도 없는데 법이 정한 기술자를 유지하느라 힘듭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볼 때가 됐습니다."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세진종합건설 대표)은 오래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체급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적이 어려운 등록기준 탓에 '범법 건설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건축에 등록기준 개선포선에 대한 검토를 공식 건의했고,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는 평소에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적격심사 서류제출 때 보유하는 식으로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쓰면 된다"고 강조했다.

등록기준을 낮추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입찰용 회사'가 급증할 것이라 우려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김도회장은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입찰용 회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기준 완화와 영역 간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키기 어려운 기준 탓에 '범법' 건설인 양산하는 골근본적인 제도개선 나서야

그는 "공사금액이 큰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와 중소규모 공사를 하는 업체에 같은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10억원, 100억원, 500억원 등 공사규모별로 구간을 정해 최소 기술자 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공사규모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3종류로 나눠 운용 중인 일본 방식과 유사하다.

김도회장은 기술자를 상시보유해야 하는 경직된 인력운용 방식에도 메스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기술

김도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유지·보수공사 등을 두고 영역 간 충돌이 빈번하다"면서 "자본금·기술자 기준 등 업종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수주해도 채산성이 없어 상당수 중소건설사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등록기준을 과연 얼마나 줄이는 것이 합당한지 업계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보완책은

실태조사·보증심사 통해 부적격업체 사전에 걸러내야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를 위해선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스크린 시스템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 부적격 업체 퇴출 시스템이 견고해야 건설한 업체의 수주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발주자와 국민에게 우수한 건설성품을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선 자격 미달업체인 74곳이 건설업을 지속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

도 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을 통한 건설업 실태조사 방식도 보완이 시급하다. 키스콘은 건설업체, 건설공사 정보의 종합관리 및 불법·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위한 직접 제재, 등록업무 위탁기관을 통한 점검 강화 등이 필요하다.

보증을 통한 사전 필터링 기능도 중요하다. 일례로 3년 연속 신용평가 등급이 'C'등

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심사를 강화하거나 보증금 거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신용등급별로 보증금·보증금·보증금·보증금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본금 예치비용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건설업종별 자본금의 총액 수준은 유지하거나 소폭 낮추고, 자본금 요건 축소만큼 예치비용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김태형기자

기술자 보유기준 완화... 현장경력 등 자격검증은 강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현재 검토 중인 등록기준 완화방안은 꽤 많다. 하지만 방안별로 장단점이 뚜렷해 어느 것 하나만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기술자 보유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가장 명쾌하다. 일례로 토목건축은 11명에서 7명으로, 토목은 6명에서 4명으로, 건축은 5명에서 3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이다. 문제는 토목, 건축 분야

에서 신규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2억원인 공공공사의 '무실적 입찰가능 범위'를 높일 경우 폭발력은 더 커진다.

토목공사업 기술자 요건만 낮추는 방안도 있다. 토목공사는 대부분 공공공사여서 공공 발주자에 의해 사전·사후 검증이 제도화된 만큼 기술인력 조건을 낮추더라도 과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건축공사는 시공자 제한규정 등에 따라 건축주 직영시공(주거용 661㎡ 이하, 비주거용 495㎡ 이하)이 허용되고 주택법에 근거해 시공자격 기준이 이미 완화돼 있다.

기술자 보유기준을 중앙과 지역으로

현재 토목건축업 하려면
기술자 11인 이상이 필요

공사 규모별·업종별·지역별
조정방안 다양하게 검토중
낙찰 후에 기술자 충족 여부
검증하는 방식 등 대안 모색

이원화하는 방법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지자체 등록을 신설하면 된다. 지자체 등록업체는 영업지역이나 1건당 도급금액에서 제한을 받는다.

둘째, 기술자 보유기준을 낮추되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기술자의 실무 경력과 상관없이 자격증만 요구한다. 이를 '관련 분야 현장경력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에선 방수공사를 등록하려면 방수공사와 관련된 5년 이상(대학 졸업 후 3년)의 현장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셋째, 공사 규모별로 건설업 등록기

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일본 모델과 가장 비슷하다. 종합건설업을 1~3종으로 나누고, 1종은 직접시공하고 2종은 하도급금액 3억원 이상, 3종은 고난이도 공사 등으로 시공자격을 차별화한다. 단, 기술자 보유기준 완화가 전체돼야 한다.

넷째, 종합건설업을 공사 종별로 등록하는 방안이다. 일종의 '특화된 종합'이라고 보면 된다. 일례로 토목공사업을 도로, 철도, 항만·공항·택지, 수자원, 터널, 교량, 기타 토목 등 7개 세부업종으로 나눈 후 해당 분야별로 기술자 1명 이상을 등록시키고 영업범위도 등록분야로 한정시키는 안이다. 다만 세부업종 간 영역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종합의 전문화'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사 낙찰 후 기술자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낙찰 전까지는 등록기준을 보지 않지만 낙찰받은 업체는 공사규모에 적합한 기술인력 보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시 실태조사를 폐지해야 한다. 낙찰자가 등록기준을 못 채우면 행정처분과 함께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입찰단계마다 등록조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행정부담이 너무 크고 평상시 '무법·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은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겸업제한 폐지 등 시장개방정책 거조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술자 보유인력 등 등록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h@

